

통일 독일의 도서관 통합 과정과 통일 후의 준비 과정에 관한 연구

노문자*

목 차

- | | |
|-----------------------|----------------------|
| 1. 서론 | 5.2 기본장서 구입프로젝트 |
| 2. 도서관의 통합 과정과 그 대책 | 5.3 지역도서관의 설립 |
| 3. 공공도서관 | 6. 지역, 전국적 서비스와 중앙기구 |
| 3.1 공공도서관의 구조 | 6.1 이상적인 상호대차 |
| 3.2 직원문제 | 6.2 협동체계의 구축 |
| 3.3 공공도서관의 장서 개발 및 설립 | 6.3 네트워크 |
| 4. 도서관 및 정보전문가 교육 | 6.4 중앙기구 |
| 5. 학술도서관의 자료 제공 체계 | 7.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 기술 |
| 5.1 학술도서관의 재정 | 8. 도서관의 법적 지위 |

1. 서 론

소련이라는 근대, 현대사에서 커다란 냉극 체제의 주체였던 덩어리가 와해되고, 그에 따라 동구권 국가들도 이데올로기 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 경제를 더 중시해가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중국도 이미 거대한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북한도 이러한 세계사적인 흐름을 거역할 수 없으리라는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김일성의 사망은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단어를 한층 더 실감있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해하고 있다.

통일된 독일 도서관계가 과거의 동독 도서관을 선진국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미리 고찰하는 것은 미래 통일

* 숭의여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조교수
집수일자 : 1995. 5. 4

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귀중한,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의 모델을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독일이 통일 후 겪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시행착오의 단계를 단축시켜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리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 전후 동서독 도서관 관계자(전문가)와 연방정부, 주정부 관계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도서관 문제에 접근했는가를 가능한 한 상세히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을 전제로한 상황에서 먼저 독일 도서관과 우리의 도서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차이를 알게된다. 첫째 우리의 현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독은 우리처럼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었고, 둘째 동서독은 그들이 분단되기 이전에 도서관의 제반 하부구조를 공동으로 구축한 점이다. 이미 그들은 1816년 부터 대학도서관들간에 자료 교환이 이루어졌고, 1890년에는 전 영토를 중심으로하는 상호대차규정이, 1892년에는 외국간의 상호대차규정이 제정되었고, 또한 상호대차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협동수서정책의 아이디어가 1797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Koschorreck 1958,31-42). 이러한 현실은 독일이 통일 후 도서관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비해 그들의 문화 정서가 비슷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통일 후 그들의 도서관 환경을 르네상스적 차원에서 재정비하는 단계로 해석하는 것 처럼 보여진다. 즉 과거 공동으로 이룩했던 도서관 전반의 기초 위에 다시 태어나는 동기를 부여받아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는것이다. 독일 통일이 흔히 경제통일이라고 일컬어지듯이 서독에로의 흡수통일이기 때문에 도서관 문제도 서독 도서관의 하부구조를 바탕으로 움직여 서독도서관 시스템으로 편향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명인 동·서독은 편의상 우리의 분단 상황에 이해되기 쉽게 과거대로 사용되었다. 통일 후 독일(독일연방공화국)은 과거의 동독을 새로운 통일 독일의 한 구성체로 보아 명칭도 새로운 주 (Neue Bundeslander)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본문에의 도서관 통합이란 구체적으로 도서관과 도서관끼리의 합병이라기보다는 주로 국가적 통일 차원에서 제도, 구조나 시스템 등이 단일화됨을 의미한다.

2. 도서관 통합 과정과 그 대책

헌법상의 통일이 가시화되기 이전 1990년초 서독연방정부, 주정부의 교육학문성 장

관과 동독의 해당 장관들은 통일 후 독일의 교육 전반에 걸친 통일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교육위원회(Bildungskommission)를 발족시켰다. 이 교육위원회에는 각 분야마다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이 분과위원회 중 도서관 문제를 다루는 도서관분과위원회에서는 도서관의 제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도서관전문가그룹(Experten-gruppe für Bibliothekswesen)을 구성하였다. 이 도서관전문가그룹 회원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동독 도서관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6개의 아르바이트그룹 (Arbeitsgruppe, AG)을 구성 조직하였다(Empfehlungen 1991).

- AG.1. 공공도서관
- AG.2. 도서관직원과 교육
- AG.3. 학술도서관과 자료제공 서비스
- AG.4. 지역적, 전국적 서비스와 중앙기구
- AG.5. 도서관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 기술
- AG.6. 도서관의 법적 지위

위 여섯개의 AG에서는 해당 분야별로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 AG는 먼저 1991년 까지 그들의 작업을 완료했으나 일년 더 연장하여 1992년 11월 8번의 회의를 끝으로 라이프찌히에서 막을 내렸다.

1990년 6월 동서독 도서관전문가그룹에는 29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이 중 11명은 동독대표였다. 회의는 교육학문성의 대표를 회장으로 시작되었고, 회장은 동서독 대표들이 순번대로 교체되었다. 이 회의 중 제일 먼저 나온 보고서에서 지적된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 동독도서관의 법적인 보장
- 단기간의 보조프로그램과 장기적 도서관 구조 조정
- 기본장서의 개발
- 도서관 예산모델안과 도서관의 기준과 표준에 관한 발전안
- 도서관 건축과 보수의 보조프로그램
- 사서, 정보전문가 교육의 개정안
- 공공도서관의 존재의식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따른 발전안
- 지역적, 전국적 도서관서비스의 협력.

6개의 AG에서는 위에 열거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시행에 옮기기 위해 이에 필요한 단, 중장기 발전안들이 해당 분야마다 발표됐다. 다음은 각 AG별 권고안

에서 다루는 동독 도서관계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등이 고찰된다.

3. 공공도서관

동독은 인구 2,000명당 공공도서관을 13,000개(Bibliotheksplan'73, 49-74)), 서독은 20,000개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정책은 문화정책과 고등 교육 정책의 필연적 요소다. 공공도서관이 학술도서관처럼 정치적인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있다. 인구밀도에 따라 잘 조직된 동독의 공공도서관망은 국민의 직업생활, 개인의 여가선용, 평생교육 등 인간생활의 전면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독의 공공도서관은 Allgemeinbildende Bucherei로서 직역하면 전인교육의 도서관이다. 이러한 의미의 도서관은 레닌의 러시아혁명 후 만인의 평등, 자본주의와의 투쟁, 문맹에 대한 처방으로서 소련 공공도서관(Massovaja biblioteka)의 모델에 기초를 두고 45년간 지속되어왔다. 이와 같이 서독의 공공도서관과는 공공도서관의 개념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AG.위원들은 동독 공공도서관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연구결과들을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3.1. 공공도서관의 구조

위와 같이 특정 이념을 배경으로 자료를 제공했던 동독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준을 AG.1은 서독의 독일도서관회의에서 제출한 도서관계획73(Bibliotheksplan '73)과 1964년 교육학문성의 지원으로 서독 독일도서관협회에서 간행한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방행정합리화권고안(KGSt-Gutachten, Offentliche Bibliothek)으로 결정했다. 이 두 가지 자료는 발간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서독 공공도서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침서에 의하면 서독의 도서관 시스템은 피라미트 형태의 구조이다. 피라미트의 가장 낮은 단계에는 전 국민을 봉사하는 군·읍·면·리의 주민을 봉사하는 가장 최소 단위의 공공도서관, 자동차문고 등이 있다. 이들 도서관의 규모는 인구 5,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장서량은 적어도 주민당 2권과 그의 시청각자료를 구비하도록 되어있다. 연간 예산은 위의 지방행정합리화 권고안에 따르면

12%의 증감과 현 장서량의 증가는 3%를 기준으로 하고있다. 연간 대출량은 봉사 인원의 6배이며, 전문인력은 1명을 기준으로 하고있다(Bibliothkesplan'73 1973 13-18). 밑에서 두번째 단계에는 시단위의 공공도서관, 세번째 단계에는 학술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이, 마지막 제일 위에는 국가 전지역을 봉사하는 국립도서관과 국립전문도서관으로 분포되어있다(Bibliothkesplan'73 1973,13-18).

1991년 가을 통일 1년 후 교육학문성은 도서관계획 '73이란 단행본 3000부를 동독의 공공도서관과 주정부, 시, 그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주무부서에 보냈다.이러한 홍보와 재정사정, 행정적인 조치의 가능성을 토대로 새로운 안을 독일 도서관회의에서 토론하여 독일의 공공도서관은 현재 도서관계획 2000년을 준비 중에 있다.

AG.1은 1991년 동독 공공도서관을 위한 업무지침서(Arbeitsvorgange, 1991)를 간행했다. 이 간행물은 결과적으로 동독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전 독일 공공도서관의 업무지침서가 되었다. 이 외에도 공공도서관의 건축에 관한 단행본 등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을 계기로 공공도서관에 관한 출판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1991년 연방정부는 약 4500억을 문화진흥촉진프로그램의 예산으로 통과시켰다. 그중 약 3000억은 유럽수준의 문화유산 보존·시설·연구발표 등의 예산으로 책정됐고, 약 1000억은 동독문화정책의 하부구조의 개선을 위해 책정되었다(Bund 1993,19). 동독 공공도서관의 하부구조 개선프로그램의 재원은 이 1000억에 포함되었으며, 이 예산은 1992년에 약 800억으로 삭감되었다. AG.1 전문위원들은 연방정부, 주정부의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그들의 결의안을 보내면서 활발한 공공도서관의 존재의식과 그들 전문가들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을 여러가지 통로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 위의 재정 현황과 관련된 동독 공공도서관 하부구조 개선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주변환경에 적합한 장서 구성과 이를 위한 자원 확보
- 공공도서관의 건축과 개축 방안
- 이동도서관
-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를 위한 정보자료
- 계속교육프로그램

서독 공공도서관은 그들의 매우 엄격한 지방행정자치제 체제하에서 분산식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오고있는 반면에 동독의 공공도서관은 일관된 계획경제정책하에서 중앙집중식으로 발전, 관리되어 왔다. 통일을 전후로 동독의 공공도서관들은 갑자기 제

정지원을 책임지는 중앙정부의 부재상태에서 혼란기를 맞게됐다. 이 혼란기에서 소규모 공공도서관, 기업의 자료실, 노조도서관들이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이들 도서관들의 자료들은 약간만이 타도서관으로 옮겨지고 그 외의 자료들은 팔리거나 기증 또는 폐기처분됐다. 그 결과 많은 도서관이 폐쇄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실직된 사서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 잘 조직되었던 공공도서관망으로 동독 전지역을 봉사하던 동독 공공도서관은 짧은 시일내에 커다란 공백기를 맞았다. 이 몇달 동안의 관리 부재 상태는 동독의 공공도서관을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사서 등 정규 사서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서독 공공도서관의 재정 시스템에 따라 시·읍·면 등의 지방행정자치제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그 조직 자체에도 커다란 변화없이 현상유지 되고 있다. 동독의 공공도서관은 주민 3,000명 이하를 봉사하는 도서관이 15% 정도에 달한다(Oehmig 1992,199). 이러한 소규모의 비전문직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의 60-70% 정도가 통일 후 폐쇄되었고, 심지어 Weissenfels란 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이 920개에서 19개, 즉 95%가 재정이나 공간문제를 이유로 폐쇄되었다(Oehmig 1992,199). 통일의 열기 이후 폐쇄되었던 도서관들은 다시 업무를 재개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도서관들 중에는 자동차문고로 과거의 업무를 계속하기 시작하였지만 만회할 수 없는 피해는 상당했다. 공공도서관의 부분적인 폐쇄와 함께 동독 공공도서관의 지도를 바꾸어 놓은 것은 노조도서관의 증발이다. 노조도서관은 동독 공공도서관의 한 부분으로서 동독 공공도서관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조도서관의 폐쇄는 도서관사적 측면에서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Oehmig 1992,196). 결과적으로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통일을 전후하여 동독 공공도서관은 약 30% 정도 감소됐다고 볼 수 있다.

AG.1 전문위원들은 위와 같이 변화된 동독 공공도서관의 상황과 새로운 행정체제 하에서의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행정체제로의 정립
- 혼란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임시규정
- 지역, 전국적 구조 조정
- 새로운 주정부 헌법에 도서관을 각 주의 의무조항으로 삽입, 촉진
- 중앙집중식 예산 책정을 주정부의 시와 다른 하위지방자치단체로 위임

위의 사업을 위해 먼저 두 개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이 권고안들은 주정부 대표

와 문화성 의회대표의 의견과 함께 동독의 각 주정부의 문화성 장관, 각 시의회의 의원, 하위 지방자치단체들의 해당 공무원과 공공도서관 관장에게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중 첫번째 권고안은 통일 후 환경변화에 따른 장서의 기준, 도서관 예산, 건물, 업무, 직원에 관한 프로필을 내용으로 하고있고, 두번째 권고안은 주정부의 법에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명시하는 것 이외에 주정부는 주정부의 예산으로 각 시마다 전문공공도서관센터(Offentliche Fachzentrale)를 설립토록 규정짓고있다. 그러나 이 권고안들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아래의 이유때문에 시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Bund 1993,23).

- 공공도서관의 폐쇄
- 40%의 장서 폐기
- 비용-효과면에서 본 경직된 인사관리.
- 정부의 예산빈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독 공공도서관들은 서독의 행정체제에 잘 융화되어 가고 있다.

3.2 직원문제

동독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그들의 실무에서 가장 예민하게 느꼈던 문제로는 실생활에 반영되는 급여에 관한 변경사항들이었다. 이와 함께 도서관 내부의 변화는 사서들에게 그들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요소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정치적으로 배속된 직원과 정년퇴임 후에도 업무를 계속했던 직원들의 해고
- 공공도서관의 폐쇄로 인한 해고
- 각 부서의 변화에 따른 해고
- 예산의 불확실성과 예산 삭감에 따른 직원의 해고.

위에서 열거한 문제 이외에도 도서관들은 해고되지 않은 직원의 급여를 서독도서관 직원들의 급여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에 당면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동서독 사서 급여의 조정안(Empfehlungen 1991,27)이 발표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1년 3월4일부터 공직의 고용주는 노동조합과 동독의 근로자에 대해 서독의 임금규정을 적용.

- 1991년 7월부터 서독 임금 보상체제와 동독의 임금 체제는 약간의 수정과 함께 수용.
- 직원의 분류는 서독도서관의 업무기준에 따라 조정. 단 도서관의 노무자는 동독에서 합의한 단일체제의 임금그룹에 따라 분류.
- 동독의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1991년 7월1일 부터 서독에서 유효한 보상, 임금, 보조금, 수당(시간초과수당및 교대근무)들의 60%를 수령함.
- 훈련수당 및 실습생들의 보수는 서독에서 유효한 금액의 60%를 수령한다. 그러나 일반추가수당은 매월 약 150,000원이 지불됨.
- 사무직원과 노무자가 6주 이상 일을 못 할 정도로 아플 경우 1991. 7. 1 이후 부터는 6주 후 시작되는 병가금 외에 추가병가금 명목으로 실수령액의 차를 고충주로부터 받음.
- 서독에서 적용되는 여행비 보상, 이사비 보상, 별거비용 보상에 관한 규정은 동독에서 그대로 적용.
- 이 보상 및 임금규정은 1992. 3. 31까지 유효.

3.3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 및 설립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확고히 하고 사회주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던 동독 공공도서관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독서운동과 교육(학습)운동의 중요한 모토(motor)로서 모든 동구권 나라의 모델이었다(Kunze 1977, 56-58). 동독의 공공도서관으로 분류되는 노조도서관은 그 설립 목적과 의식이 투철하였고, 그 성과 역시 대단했다. 노조도서관은 특히 이용자의 확보를 위해 능동적인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장에서 도서대출을 가능케 했다(Oehmig 1992,196-197). 노조도서관의 장서는 1)학문적, 기술적 혁명 2)평등한 사회주의적 교육 시스템 3)사회주의 문화혁명의 지속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통속소설 4)막스-레닌니즘의 자료들로 구성됐다. 과거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장서내용들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의 개념과 장서개발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형 인간양성과 관련된 장서가 서가에서 자취를 감추고있다. AG.1의 전문가들은 기존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에서 순수문학작품과 어린이도서는 각 10%씩, 일반도서와 전문도서는 각 15%씩 교체시킴으로서 1992년 말까지는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 40% 이상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았

다(Bund 1993, 24). 동독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과거 자유롭게 접할 수 없었던 서방 세계의 자료들 중에서도 특히 경제, 컴퓨터, 법률, 기행문, 카운셀링, 현대미래학, 통속 소설, 코믹과 시청각자료의 순으로 그들의 장서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냈다.

공공도서관의 예산은 많으면 많을 수록 적으면 적을 수록 장서개발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 개발은 연방정부의 보조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이전에 상당부분이 도시간의 자매결연 형식으로한 도서관끼리의 자료 기증을 통해 이루어졌다(Barsch und Gloger 1994, 43). 이 외에도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 개발은 자발적인 국민운동의 일환인 “독서재단”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기증을 통해서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움은 체계적인 장서구성에 한계가 있다. 서독의 공공도서관의 장서 개발에 큰 역할을 하고있는 EKZ(Einmkaufszentrale für Öffentliche Bibliothek)은 동독의 공공도서관의 장서 개발에도 역시 참여하고 있다. 이 EKZ는 공공도서관을 위한 일종의 쇼핑센타라고 할 수 있다. EKZ는 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한 장비 일체에 관한 모델, 즉 서가나 참고데스크 등을 제공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도서와 도서관(Buch und Bibliothek)이란 공공도서관 전문학술지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자료에 관한 서평이나 기본장서리스트를 제공하고있다. 과거대로 동독 공공도서관에 관한 전반 사항을 통제, 관리해왔던 도서관 중앙연구소(Zentralinstitut für Bibliothekswesen, ZIB)는 통일 직후 EKZ와 밀접한 협동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ZIB는 통일 후 얼마 안되어 서독 백림의 독일도서관연구소(Deutsche Bibliotheksinstitut, DBI)로 통합되었다. 독일도서관연구소에서는 1986년 이미 공공도서관 참고봉사에 관한 단행본을(Informationsdienst 1986), 1991년에는 공공도서관 수서를 위한 스태프뉴얼과 참고도서를(Wiener 1991), 1992년에는 주로 동독의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한 주요참고도서리스트(uswahlverzeichnis 1992)와 아동, 청소년을 위한 비디오자료(Kinder 1992)를, 1993년에는 공공도서관의 참고서가자료(Auswahlliste 1993) 등의 간행활동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동서독 전문가들의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거론된 주요 주제의 하나는 (부분적인)민주주의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열린 학교도서관의 건립이었다. 학생들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문서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했다. AG.1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건립을 문화정책의 기초적인 사업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사업임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독일도서관연구소의 학교도서관 전문가들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관한 권고안과 동독의 학교도서관 설립에 관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동독의 주거지역, 쇼핑센터 또는 학교건물에 소규모의 분산식 아동도서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서들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인원 감축이라는 현실적인 경쟁심리때문에 거부반응이 있기도 하다. 서독측에서도 역시 위에서 언급된 공공도서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도서관 건립 계획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없지는 않다. 서독의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서독에서조차도 아주 이상적으로 운영되고있지 않은 거창한 계획들을 동독 도서관에 접목시키는 것은 너무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Bund 1993,28). AG.1의 권고안들이 연구되고 부분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 동독은 서독에 비해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비중을 두고 있음이 확인됐다. 동독은 공공도서관에 보다 더 큰 관심을 집중 시켰던 반면에 서독은 상대적으로 학술도서관에 관심을 두었다. 이 점은 동독이 공공도서관을 이데올로기의 장으로서 활용했던 점과 무관하지 않다.
- 동서독은 각기 그들 도서관시스템의 장점은 장점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했으며, 또한 각 시스템을 비교하는 경쟁심리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 변화된 상황에서 동독의 도서관계는 과거 그들 시스템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면서 서독의 시스템에 융화하려고 노력했고, 또한 그 주장을 고수하려고 했지만 통일 후 시간이 경과되면서 여러 주변상황은 결국 서독의 시스템에 따라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다.

4. 도서관 및 정보전문가 교육

6개의 아르바이트그룹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테마인 이 문제는 교육과 연계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 방법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AG.2 전문위원들은 동서독 도서관 동료들의 경험과 그들의 도서관(특히 공공도서관)에 관한 상이한 인식의 차이를 신속성있게 수용해야하는 입장에 있었다. 양측이 모두 도서관, 정보전문가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신속한 시일내에 해결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침아래서 1991년 1월 동서독 도서관, 정보전문가교육 평준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동독 도서관 사서, 정보전문가 교육과정과 직업교육의 상황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조사되었다. 이 권고

안에서는 동독의 사서, 정보전문가(Dokumentar와 Informator)의 자격이 인정되어 서독의 사서, 정보전문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서독의 자격증과는 다르게 불리고 있는 동독의 자격증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안이 제시되었다. 동독의 사서, 정보전문가의 명칭은 10가지인 반면 서독의 그것은 6가지이다. 다음은 서로 다르게 불리고 있는 전문가자격증(Empfehlungen 41-42)들을 비교하였다.

〈동 독〉	〈서 독〉
1. 도서관전문노동자 (Bibliotheksfacharbeiter)	준사서 (Assistenten an Bibliotheken Bibliotheksassistent)
2. 공공도서관, 노조도서관 정사서 (Bibliothekar Fachrichtung Staatliche Allgemein-und Gewerkschafts- bibliotheken)	공공도서관 정사서 (Diplom-Bibliothekar an Oddentlichen Bibliotheken)
3. 학술도서관, 전문도서관 정사서 (Bibliothekar Fachrichtung Wissenschaftliche Allgemein-und Fachbibliotheken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학술도서관 정사서 (Diplom-Bibliothekar gehobener Dienst an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4. 정보전문가 (Informator, 1974년까지 도큐멘탈리스트)	도큐멘타 (Diplom-Dokumentar)
5. 일급정사서 (Referendarausbildung)	일급정사서 (Wiss. Bibliothekar hoher Dienst)
6. 일급전문사서 (Fachbibliothekar mit abgeschlossenem Hochschul-studium einer Fachdisziplin, Fachdiplom)	위와 동일
7. 일급정사서	위와 동일

- | | |
|--|--|
| (Wiss. Bibliothekar mit bibliothekswiss. und fachwiss. Hochschulstudium, Fachdiplom) | |
| 8. 일급전문사서 | 위와 동일 |
| (Bibliothekar mit abgeschlossen. Hochschulstudium einer Fachdisziplin, Fachdiplom) | |
| 9. 일급정보전문가 | 일급도큐멘탈리스트 |
| (Informator(Univ.) bzw. Diplom-informator mit informations-wiss. und fachwiss. Hochschulabschluss, Fachdiplom) | |
| | (vgl. Diplom-Informationswiss. bzw. Magisterabschluss) |
| 10. 일급주제전문정보가 | 위와 동일 |
| (Fachinformator mit abgeschlossenem Hochschulstudium einer Fachdisziplin, Fachdiplom) | |

사서들의 다양한 명칭을 단일화하는 작업 이외에 AG전문가들은 동독의 사서, 정보전문가 교육기관에 관한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동독의 교육과정을 가능한 한 수용하면서 이 분야 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들이 검토됐다. 그 결과 동독의 사서교육학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Leipzig와 백림으로, Thuringen의 사서교육원은 준사서를 위한 이론교육의 장으로 지정됐다. 그 외에도 과거 동독의 사서들이 서독의 사서교육과 비교해서 교육 연한에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계절학기 등을 통하여 작센과 백림에서 해당 기간을 보충하는 방법도 고안됐다. 도서관, 정보분야에서 봉사하는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들을 위한 1년과정의 계속교육코스는 라이프찌히에서 제공하고있다. 라이프찌히의 사서교육기관에서는 최근들어 사서과정 이외에 박물관관련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정보 관련분야의 교육이 다양해지고 있다(Plassmann 1992, 555-557).

통일 후 독일에서는 유럽통합을 염두에 두고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관련분야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유럽도서관, 유럽사서의 개념을 고려하여 이에 합당한 교육문제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있다(Lehmann 1990 289-306).

5. 학술도서관의 자료 제공체계

5.1 학술도서관의 재정

AG.3의 전문위원은 교육학문성의 대표, 동서독 사서, 서독의 독일도서관연구소와 동독의 학술도서관 문제를 연구하고 관장하는 대표기관인 학술도서관센터(Methodische Zentrum)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들의 과제는 미래 동독의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해 도서관 하부구조안을 제시하고 단기간에 동독 학술도서관의 예산을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통일때까지 외환 부족으로 입수하지 못했던 선진 서방세계의 학술서적을 구입하는 일이었다. 이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자료의 입수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술도서관의 예산 실태와 자료구입비의 상승을 감안해야 했다. 서독에서는 90년대초 학술자료 가격의 연간 상승율은 약 5%이고, 영국의 경우 정기간행물은 약 10.5%였다(Ketcham and Born 1993, 42-48). 독일 연속간행물의 상승율은 9.4%이며, 미국은 학술서적의 연간 상승율 11.4%를 기록하고있다. SCI Journal Citation Report의 연속간행물 가격과 환율의 회계결과 1988년과 1992년 사이에 화학분야에서는 94.5%, 물리학분야는 77.6%가 인상됐다. 반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인상은 7.5-10%에 머물렀다.

도서생산량에 있어서 독일은 1985년부터 2-5%의 증가율을 보였고, 단행본 이외의 인쇄자료(팸플렛, 회의자료)는 단행본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CD-Rom시장은 전통적인 인쇄자료의 신장율을 훨씬 능가하여 1988년에 200여 타이틀이 1993년에는 3500타이틀로 늘어났고, 그의 가격도 2102 US-Dollar에서 106 Dollar로 하락됐다.

위의 학술자료 가격의 상승률과 자료의 유형에 따른 출판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67개의 서독 학술도서관의 예산은 1992/93년 평균 4.8%인상됐고, 60년대 후반에 설립된 신생 대학도서관의 예산은 20%인상을 보여 서독에서도 학술도서관의 예산편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있다(Griebel 1993, 485-526). 동독 13개 대학도서관의 경우 통일 직후 기본장서의 예산은 73.3% 까지도 올랐던 예가 있었던 반면 통일 2년체인 1992/3년에는 50% 상승율과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그 격차가 심했다.

동독 학술도서관의 미흡한 장서의 빈곤을 회복하기위해 민간차원의 보조금도 동독 학술도서관의 장서 증가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BMW와 폴크

스바겐재단(Volkswagen-stiftung)은 대학도서관의 지정도서파트에 학생당 약 15,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Dorfinghaus 1991, 190-193). 위와 같이 자료 입수의 환경이 호전되어가고 있는 동안 AG 3의 전문가들은 동독 학술도서관의 활발한 자료 공급을 위해 우선 두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그 중의 하나는 일반 경상예산 이외의 기본장서 구입프로젝트와 서독의 분산식 자료제공시스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역도서관의 설립이다.

5.2 기본장서 구입프로젝트

통독이 진행되는 동안 서독 연방정부의 교육학문성은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독 대학도서관의 절대부족한 장서 실태에 접하자마자 45억원의 예산집행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 작업의 첫 단계는 위의 예산집행을 위한 구체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안은 동독 대학도서관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자주 사용되는 기본장서를 구입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론에서는 먼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생당 약 70,000원의 자료구입비를 책정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분야의 어떤 도서를 우선 순위로 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었다. 통일 직후의 상황에서 동독 대학도서관은 그들의 자료 선정에 있어서 서독 사서의 자문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AG3의 전문위원들은 점차로 동독 도서관 사서 스스로가 위의 업무를 담당토록 권했다. 이와 관련해 서독 사서들은 서방세계의 자료 선정에 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성있는 자료선정목록을 제공하거나, 지정도서인 경우에는 서독 여러 대학도서관의 표준도서리스트를 제공해줌으로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위의 작업은 서독의 독일도서관연구소의 주도아래 이루어졌다. 그 결과 빠른 속도로 동독 대학도서관이 각 전문 분야별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동독 학술도서관이 서독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예산 지원 기간을 정부측에서는 10년으로 추정하나 도서관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12년이다 (Griebel 1993,526).

5.3 지역도서관의 설립

학술도서관의 효과적인 자료제공 서비스는 어느 특정 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독은 분산식 자료제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피라

밋형의 구조로서 1단계의 소규모 도서관에서 제일 위 4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국도서관의 골고른 발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서독은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각 주(Land)마다 지역종합목록센터(Regionale Zentral-katalog, ZK)가 있으며, 이 지역종합목록센터는 주로 해당 주의 대표도서관에 소재하거나 또는 주의 지역대표도서관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호대차에 관한 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 후 동독은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산식 자료제공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각 주 단위의 지역종합목록센터와 지역도서관(Regional Library)을 설립해 동독의 원활한 자료제공 서비스를 위한 하부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방자치제 중심의 행정체제에서 근본적으로 지역도서관의 기능을 살리는데 중점을 둔 장기 계획이며 또한 서독의 분산식 도서관 시스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동독은 40여년간 다른 체제 하에서 도서관시스템이 중앙집중식으로 운영되기는 했지만 행정구역의 구분이나 다른 여러 문화시설, 문화유산등도 과거의 골격은 상당수 유지하고 있어 큰 이질감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도서관이나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 잘 다듬어진 서독과 비교는 안될지라도 분단전의 주립도서관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 도서관을 토대로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동독에 새로 설립될 지역대표도서관이나 지역도서관의 기능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한 주(Land)의 자료에 대한 납본을 책임지며
- 해당 지역에 관련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며
- 지역서지(Regional Bibliographie)를 발간하며
- 해당 지역의 종합목록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도서관협동센터의 역할도 맡으며
- 해당 주에서 발생하는 상호대차에서 조정도서관(Leitbibliothek)이 되며
- 전문가 계속교육을 조직, 관리한다.

6. 지역, 전국적 서비스와 중앙기구

통일된 독일의 과제는 동서독 지역경제의 격차를 줄이고 전 지역에 걸쳐 골고른 발전을 이룩하여 진정한 민중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동독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이데올로기의 혼란에 빠져있는 동독 주민에게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접하게 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낙후되어 있었던 과학기술의 노하우를 동독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작업이 급선무다. AG 4의 전문가들은 동독의 자료제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과거 그들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서독의 분산식 자료제공시스템에 융화시키는 작업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세부 항목으로 그들의 업무를 분담했다.

- 이상적인 상호대차
- 도서관 협동체계의 구축
- 네트워크
- 표준과 기준
- 중앙기구

6.1 이상적인 상호대차

동독에서 충족되지 않은 동독 이용자의 자료 요구는 서독 파트너지역의 지역종합목록센터에서 일차적으로 해결된다. 서독의 상호대차는 분산식 자료제공 시스템의 기반 아래 7개의 지역종합목록센터와 5개 국립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있다. 동독에 비해 장서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서독 도서관들은 동독의 이용자를 위해 그들의 장서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공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지금 동독의 상황은 20여년전 서독의 베이비붐 시대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70년대 서독의 신생대학이 설립될 당시 신생 대학도서관들은 학생들 상당량의 자료요구를 자관에서 보다 외부의 상호대차를 통하여 충족시켜 주었다. 신생대학도서관이 어느 수준에까지 그들 자료를 수집할 때까지 대규모 기존의 대학도서관들은 신생대학 도서관을 보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호협조를 약속하였다. 지금의 동독은 과거 서독의 신생대학도서관들처럼 서독 도서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상적인 상호대차를 위한 구체 방안(Bund, 91-92)으로는 먼저 동독의 학술도서관은 어느 정도 자관의 이용자 요구 충족을 위해 그들 자체의 장서를 확충함으로써 상호대차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AG 4는 상호대차 촉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상황변화에 따른 상호대차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착수했다. 새로운 주변 환경에 적합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에 따른 상호대차의 여건이 감안되어야 했다. 특히 여기에는 통독 후 온라인 시대에 걸맞는 상호대차 세부 규정작업이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 a. 서지사항의 기계화 : OPAC의 이용, 종합목록의 CD-ROM화
- b. 상호대차의 구조변화와 자료의 주문, 전달 과정의 변화가 다루어졌다.

상호대차의 기본 골격은 항상 한 지역의 이용자 요구는 가능한 한 해당 지역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지역주의의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이는 강력한 지방자치체 제에서 전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독일 특유의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제공에 있어서 지역주의 원칙은 불변하지만 상호대차의 가장 큰 난점인 신속성에 비중을 두다 보면 자연 예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신속한 상호대차의 주문과 자료 수송 과정에서 온라인목록과 마이크로필름을 최대한 활용하는 문제, 요구 자료의 형태와 수송 방법의 다양성에 따른 해결책 등이 이 분야에서 언급되었다. 요구된 자료는 과거 전통적인 종이 형태에서부터 마이크로필름, 전자식 형태의 자료로 대별되고, 자료의 수송 방법도 자동 차수송, 우편 수송과 전자식 등이 있다. 전자식 자료의 수송 방법에는 온라인 방식과 Mail box방식이 있다. 위의 최신의 데이터 수송 방법에는 자료의 사용권(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학술잡지의 신속한 주문과 배달을 위해 각 주마다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예로 Nordrhein-Westfalen 주와 Niedersachsen/Sachsen-Anhalt주의 JASON(Journal Articles Sent on Demand)과 SWETSCAN시스템이 있다. 또한 통합된 유럽 차원에는 1993년 중반 부터 EDIL(Electronic Document Interchange between Libraries)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독일의 하노버(Hannover)공과대학, 영국의 British Document Supply Center in Boston Spa, 불란서의 Institute de l'i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in Nancy, 네델란드 Leiden의 PICA 시스템 공동으로 협력하여 유럽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학술잡지 기사를 제공하는 개선된 서비스다 (Dokumentlieferung 1944, 384).

AG 4는 상호대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서지기구와 서지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권고안도 발표하고, 예측 가능한 상호대차를 통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통계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보다 더 발전된 자료 제공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도 그들의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AG 4에서는 지역종합목록과 학술잡지 데이터베이스를 빠른 시일내에 CD-ROM화 하여 동독도서관에 제공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독의 학술잡지 데이터베이스에 동독의 학술잡지를 입력하는 사업은 1993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계획됐다.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의 수송 방법에서 새로운 운영방식을 연구 중에 있다. 자동

차로 자료를 수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자료 제공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공공의 서비스 개념을 탈피하여 신속하고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위해 민간기업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상업적인 자동차서비스의 도입도 연구과제로 채택됐다.

6.2 협동체계의 구축

AG 4의 사업 중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분야가 자료제공에 있어서 협동의 질서를 제시하는 협동체계의 구축이었다. 동서독 도서관의 협동체의 구축을 위한 동독의 상황은 사실상 몇가지 지역적인 경험을 제외하고는 매우 취약한 편이었다. 협동체의 구축을 위한 권고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추진되어야 했다.

- 자료의 제공과 서지정보의 제공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정신에 입각하여야 하며
- 각 도서관은 이용자와 서비스의 비율에 적합하고도 현실성있는 도서관 규모를 재정립해야 하며
- 이용자 서비스는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협동체 구축을 위해 발표된 권고안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독 도서관은 서독의 협동네트워크에 협력해야 한다
- 이 협력체는 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재원 조달은 일시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 공동의 약정이나 표준은 지켜져야 한다

AG 4의 전문가들은 위 권고안의 시행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비용모델과 비용추정안, 이외에 행정상의 협약이나 지역간의 협약을 위한 표준 조약서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세부작업의 결과 통일 독일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4개의 협력체가 탄생했다. 여기서의 지역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협력체라 함은 거리상 동독 도서관과 인접한 서독의 지역종합목록센터와의 연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협동연합체의 구성에는 도서관 업무에서 필요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표준과 기준에 당연히 서로가 동의함을 의미한다.

- 편목규칙의 통일 : 학술도서관 편목규칙, 공공도서관 편목규칙, 주제명표목표, 독일 단체명표목표.

- 데이터의 구조 : 독일기계가독형포맷 MAB(Maschinelle Austausch Format der Bibliotheken), 퍼스널컴퓨터 가독형목록(PC-MAB).

동독 사서들은 위의 기준과 표준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통일이 되자마자 시작하였다.

6.3 네트워크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있는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기술과 함께 정보기술 혁명시대에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신속한 자료의 제공은 도서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에서부터 단체기관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요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그리하여 통일 후 독일의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도서관망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범위를 학술정보와 관련된 모든 유사기관과 연결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래 정보유통과의 상호 이용까지도 연계시켰다. 이러한 사업은 기술적인 문제에서 모든 정보관련 유사기관과의 협력에서만이 가능하다. AG 4는 먼저 동독에서의 학술망(WIN, Wissenschaftsnetz)을 구축하여 여기에 도서관망이 참여하는 계획을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 AG 4는 독일연구망의 이용자그룹과 공동으로 동서독 도서관의 이용자들로 인해 학술망의 부담이 어느정도인지 예측치의 연구조사에 착수했다(Bund, 45). 동독에서는 몇 년 내의 정보기술 수준을 감안하여 64Kb급으로 학술망의 구축을 권하였고, 또 그 사이에 독일학술망의 사정도 호전되었다. 독일 도서관망이 독일학술망에 참여함으로써 독일학술망은 첫째 지역의 대학과 그들의 최종시스템과의 연결을 가능케 하고, 둘째 지역시스템을 전국적인 정보망 시스템으로 확장시키는 두 가지 임무를 띄게 되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독일학술망이 도서관망에 요구하는 사항들, 즉 다양한 탐색어와 데이터구조 등의 문제에 대해서 AG 4는 각 기관의 시스템과 지역, 전국적 종합시스템을 표준화 규격화된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모델을 응용한 종합 상호시스템의 구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OSI-Protokoll에 의하면 도서관 분야는 SR(Search and Retrieval)과 ILL(Interlibrary Loan)이 부각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그 초점이 모아진다.

- 최종 이용자에게 요구된 자료의 신속한 제공
- 자료의 검색, 자료의 서지사항, 자료의 주문과 수송을 연결하는 작업

- 수서와 편목의 지원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외부 데이터의 이용.

표준화된 종합시스템은 오픈시스템의 장점인 컴퓨터 상호간 연계 강화를 통하여 분산된 자료가 어느 지역의 어느 시스템에 속하는 것과 관계없이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독일연방 과학기술성과 독일학술진흥재단은 OSI종합시스템의 구체화 프로젝트를 건의하는 등 1993년 3월까지의 주요사업에 착수하도록 계획에 들어갔다. 학술망을 종합 오픈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있어서 학술망의 표준화 작업은 학술망 차원에서 필요로 하고, 또한 도서관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표준화 작업에 있어서는 도서관 분야대로 이에 필요한 문제를 통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중앙기구가 필요했다. 이 기구에는 독일 전 지역의 서지를 책임지고 있는 독일국립도서관이 지정됐다.

6.4 중앙기구

전문가그룹이 구성되면서부터 도서관을 대표하는 동서독 중앙기구의 통폐합 작업은 활발히 진행되었다. 동독측 중앙기구의 통폐합에 있어서 전문가그룹은 기존의 현실을 최대한으로 감안 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동독의 학술, 공공도서관 문제를 전담했던 Methodische Zentrum과 Zentralinstitut für Bibliothekswesen은 서독의 독일도서관연구소(DBI, Deutsche Bibliotheksinstitut)로 흡수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 서베를린에 설립된 독일도서관연구소는 독일 모든 도서관 유형을 망라하여 도서관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그들의 연구업적과 출판활동은 독일 도서관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이미 자리잡고 있다. 이 독일도서관연구소의 고유업무는 독일도서관협회, 독일사서협회, 독일 학술도서관 정사서협회, 독일 공공도서관 정사서협회, 독일도서관회의, 독일 학술진흥재단의 도서관연구회, 독일 도서관업무 연구회, 도서관 관련 기술연구회 등의 업무들이 예산의 낭비와 중복업무를 피하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데 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7:3의 비율로 재정이 지원되어 유지되고 있는 이 연구소의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적 차원의 도서관 관련의 계획과 조직 2) 도서관 시스템, 도서관망의 분석과 계획, 도서관 협동을 위한 제언들의 처리, 독일 도서관통계작업의 분석, 도서관 관련자료의 포괄적 수집, 평가, 협동수서와 상호대차의 개선을 통한 자료제공의 개선책 연구, 기존의 국내외 데이터 포맷과 목록규칙의 발전을 통해 전국적 기계가독형 서지데이터베이스를 발전시키는 업무 3) 도서관 업무의 계획과 조직, 도서관시스템의 계획과 조직, 도서관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한 연구를 경영학적, 사회학적 방법

을 통해 모델을 발전시키는 업무 4)수서와 정리 자료이용에 있어서 최소 비용과 최대 효과를 목적으로 업무과정을 연구, 목록규칙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와 이에 필요한 보조자료의 출판, 표준화된 분류체계의 발전과 사용, SDI와 그 외 자료정리를 위한 방법(디소러스 등)연구, 장서구성을 위한 보조자료의 발간 5)예산, 통계, 회계: 도서관 예산의 분석, 예산책정의 방법론, 예산의 계획에 대한 관리와 검토, 예산모델의 설정, 도서관의 분석과 해석, 도서관 회계를 위한 보충자료의 연구 6)이용자 연구와 도서관 홍보: 이용자 연구와 이용자 교육에 관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수행, 도서관 홍보를 위한 연구 7)국제협력업무: 외국 도서관계에 관한 정보 전달, 사서의 교환과 사서들의 도서관 현장답사 여행의 조직, 8)계속, 평생교육(Rechtvorschriften 1992, 86). 1989년 11월부터 독일 도서관연구소는 자연스럽게 동서독 사서들 관심으로 동독 도서관 전반에 관한 정보와 제반문제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Schmidt 1990, 457).

독일도서관연구소는 그들의 출판활동을 통해, 예를 들면 서독에는 동독 도서관계의 낙후된 상황을, 동독에는 서독 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독일도서관연구소는 동 서독 도서관의 교량역할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서 그 결과 동서독 도서관의 센타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 독일도서관연구소가 198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은 아래와 같다.

- 정기간행물 데이터베이스(백림프러시아문화재 도서관과 동독 국립도서관과 협동으로)
- 동서독 도서관 주소록
- 상호대차를 위한 도서관 기호리스트
- 독일도서관통계
- 독일도서관 홍보활동

이외에도 독일도서관연구소는 6개의 도서관전문가그룹의 총지휘 기능을 위임받아 동서독 도서관 발전에 관한 전반 사항을 관장하고있다.

중앙기구의 통폐합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의 처리 문제다. 1912년에 설립된 라이프지히의 동독 국립도서관과 분단 후 설립된 서독의 프랑크프르트 국립도서관 두 도서관 중 어느 곳을 국가 대표도서관으로 정하는 문제에서 묘한 심리적 갈등이 표출되었다. 분단 전부터 독일을 대표했던 라이프지히의 동독 국립도서관은 과거의 기득권을 주장했던 반면 분단의 정치적 산물인 서독의 국립도서관을 통일 후의 국립도서관으로 지정하는 데는 역시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두 도서관들은 어느 도서관도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프랑크프르트 국립도서관은 라이프지히도서관이 소장하고있는 1912년 이후 자료의 공백 때문에 미흡했고, 반면 라이프지히 도서관은 프랑크프르트 도서관의 운영체제에 비해 예산이나 시설등 미흡한 면이 있다. 이러한 양측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기반이 튼튼한 서독의 프랑크프르트 도서관이 통일된 독일의 국립도서관으로 결정됨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한다. 과거 정치적인 이유때문에 경쟁 상대였던 두 국가대표도서관이 지금은 협동을 약속하고 과거의 업무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자유경쟁 원리하에 가능한 한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합리화 차원에서 업무를 분담하였다. 법적으로 통일 독일의 국가대표도서관은 프랑크프르트 국립도서관이지만 라이프지히의 도서관도 계속 유지되면서 서로간에 업무의 조정만이 있었다. 그리하여 공식적인 독일 국립도서관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듯 하위명칭으로서 과거의 명칭인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Deutsche Bucherei Leipzig)과 베를린 독일 음악아카이브(Deutsche Musikarchiv Berlin)를 추가로 덧붙였다. 두 국립도서관의 업무 내용을 보면 자료의 보존과 이용은 과거와 같이 수행되지만 아래와 같은 변화가 뒤따랐다.

- Frankfurt 국립도서관: 국가서지의 발간과 배포,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센타, 독일 망명아카이브의 유지.
- Leipzig 독일도서관: 국가서지의 간행, 도서수집의 중앙센타, 납본도서관, 독일 음악아카이브(Beyersdorf 1991,30), 활자박물관, 특수장서수집(Steigers 1991,71).

동서독 국립도서관끼리 협동의 분기점은 우리의 분단 상황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부연한다. 두 국립도서관끼리 협동의 시작은 1985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문화광장에 동서독 도서관 대표가 참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화광장에서 동독의 대표는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국제표준서지포맷작업에 참여한다는 찬성표를 던졌다. 동독 국립도서관이 국제데이터교환포맷에서 수신, 발신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은 그들의 국가서지작성에 관한 시설을 현대화 시켜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동독의 사정은 이 분야에서 서독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쟁관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서독측에서는 언제나 동독과의 관계 개선에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동독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동독의 국제서지데이터포맷

에 서독의 MAB-포맷을 응용시켰다. 이 과정에서 두 국립도서관은 서로 뗄 수 없는 협동의 파트너로 발전되었다. 동시에 1990년의 정치상황은 도서관의 협동관계 보다 더 빨리 발전하여 두 도서관은 업무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합병 흡수의 단계에 다달았다. 동독이란 독립국가가 헌법상 없어진 결과 동독의 국립도서관은 재정난에 처했었다. 위의 여러가지 상황들은 물론 독일 국립도서관을 서독의 국립도서관으로 결정짓는 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서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특히 정치적 이념과는 거리가 멀었던 동독의 일반 사서들은 갑자기 서방세계의 도서관 접근론과 방법론으로 인하여 그들이 몇십년 동안 발전시켜온 고유의 것들이 갑자기 구식으로 취급되어버린 사실에 대해 혼란을 겪었다(Rost 1992, 187). 이 예에서 보듯이 두 도서관의 합병이나 흡수는 업무의 합리화 등의 이성적인 요구의 측면에서만 고려될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Rost, 189).

도서관 관련 중앙기구로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독일학술진흥재단(DFG,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이다. DFG는 동독 도서관 장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협동수서정책인 SSG-Program에 동독 도서관을 참여시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자료제공서비스에 관한 한 여러가지 사업, 예를 들면 자료의 전산화, 정기간행물의 입력, 특수장서의 정리사업, Inkunabel의 정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Einbeziehung 1991, 182-189).

7.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 기술

도서관과 정보 기술 분야에서 AG5는 먼저 전국 상호대차의 기본이 되는 도서관망의 문제에 접근했다. AG4 에서도 언급된 도서관망은 독일의 학술망과 연구망에 도서관망이 연결되는 국가 차원의 정보망이었다. 반대로 여기서는 도서관망 자체에 한계를 둔다. 통일 후 도서관과 정보기술 문제에서 AG5는 도서관망의 조직에 있어서 적어도 한 나라에는 단일화된 하나의 도서관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다 기본 입장을 두었다. 즉 동독에 독립된 도서관망을 구축하는 것 보다 서독에 이미 구축되어있는 도서관망 시스템에 협동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지리적인 환경을 감안하여 도서관끼리 파트너를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Bund 1993,11).

동독의 대학도서관은 도서관 기술 장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예산과 직결된 도서관 장비, 특히 전산화와 관련된 시설에서 동독도서관은 미래 지향적인 제안인 퍼스널컴퓨터로 도서관망을 구성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결정은 서독의 전통적인 분산식 도서관 자료제공 시스템을 감안하여 도서관 전산화에 앞장서 있는 외부의 특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였다. 통일 전까지 동독의 도서관 전산화는 매우 취약한 여건에 처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서 연방정부의 지원, 자동차입계의 기금, 특별 예산 충당, 그 외 사회 여러 분야의 재정지원을 통해 먼저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려 놓으면서, 이 새로이 입수된 자료를 초석으로 전산화 작업이 시작됐다. 전산화의 환경에 있어서 학술도서관의 경우 동독 대학도서관시스템은 중앙도서관과 각 단과대학도서관이 서로 독립 운영되고 있는 서독의 대학도서관과는 달리 중앙통제식의 단일시스템으로 운영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대학도서관의 통합된 전산화 시스템을 위해서는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EDV-gestutzt 1991, 61). 19개 동독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축된 PC-Network는 5개 주 단위의 지역정보센타의 역할을 분담한다. 주 단위의 지역정보센타는 기술적으로 PC-Network를 기반으로 동독의 타지역의 정보센타, 더 나아가서는 서독의 지역종합목록센타와의 파트너 역할을 분담하여 궁극적으로는 전국도서관망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있다. 서독 대학도서관에 비해 외부 자료의 의존도가 높은 동독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PC를 보급받은 도서관은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CD-Rom으로 대체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미 서독 도서관에서 CD-Rom Network가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Bund 1993, 51).

동독 공공도서관의 전산화 환경은 통일 후 과거 지역구 중심의 도서관 구조에서 서독과 같은 주(Land)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는 후 서독의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몇몇의 큰 지역 단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마이크로컴퓨터가 도서관 업무에 부분적으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동독 공공도서관의 전산화는 거의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동독 공공도서관의 전산화를 위한 업무에 있어서는 학술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거의 획일화된 시스템을 유지한 결과 업무의 내용, 즉 장서의 구성, 도서관의 기능, 공공도서관 편목규칙, 분류(성인도서관, 아동도서관), 비도서자료, 향토자료, 주제명표목표, 도서관통계, 통일된 업무지침과 방법에서는 서독에 비해 오히려 더 유리한 여건에 놓여있었다(Bund, 62).

8. 도서관의 법적 지위

독일의 연방주의는 독일이 100여년 전에 처음으로 통일 국가가 되면서부터 시작된 독일 특유의 정치적 역사적 현실이다. 서독 자체만으로서도 독립성이 강한 연방국가 가 동독을 흡수하면서 동독을 동일한 연방체제의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대한 법적 절차는 통일국가의 헌법에서 다루어지지만 AG.1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특히 공공도서관계에서는 통일 직전과 흡수과정의 과도기에서 많은 도서관이 해체, 붕괴되어버린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6번째 AG전문위원들은 동서독간의 구체적인 확고한 헌법상의 기초 작업이 끝날 때까지 동독도서관은 과거 그들의 도서관 관련 법조항을 적용시키면서 통일 후의 동독도서관의 법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도서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전문위원들은 도서관학 지식 이외에 법적 지식을 겸비하여야 하는 특수성때문에 그들은 외부의 전문가인 주의원 법률가를 그들의 연구에 참여시켰다. 또한 AG.6의 연구는 독일도서관연구소의 도서관법제위원회에서 계속하여 AG가 해체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서관법에 관한 단행본은 흔하지 않다. 서독의 경우 지금까지 도서관법에 관한 단행본은 3가지였다. 통일 후 새로운 상황변화를 계기로 1992년 출판된 도서관실무에 관한 법(Rechtvorschrift für die Bibliotheksarbeit)은 연방정부의 도서관 관련 법규, 각 주정부의 도서관 관련 법규, 주정부의 대학도서관 관련 법조항, 공공도서관 관련 법조항과 도서관 실무에 관한 세부 규정까지도 집대성하여 통일 후 독일도서관연구소의 연구능력을 가시화 하기도 했다.

서독의 도서관 관련 법으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있는 독일도서관연구소와 프랑크프르트 독일도서관법이 있다. 그의 대학도서관 관련법은 주정부의 대학 설립기준에, 공공도서관 관련법은 주정부 산하의 시와 지방 하위 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설치령을 다루고 있다. 도서관 업무에 관한 규정은 행정 규정으로 다루고있다. 이와는 전혀 다르게 동독의 도서관 관련 법은 사회주의적 중앙집권식의 (가상)법규로 매우 포괄적이다. 동독 도서관의 법적 지위를 위한 전문위원들의 첫 번째 과제는 헌법상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되면서 동독의 도서관 관련 법을 서독 도서관 법에 동등하게 융화시키는 작업이었다. 이리하여 통일 전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운영 지시되고 있던 도서관을 포함한 동독의 모든 각종 문화단체, 기관들은 서독의

행정 체제에 따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에 운영되게 되었다

도서관 실무에 관한 법적 조항과 관련되는 사항은 납본법의 변경이다. 통일 후 납본처는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독일 국립도서관과 라이프찌히의 독일도서관, Marburg의 Westdeutsche Bibliothek, Bonn의 의회도서관, München의 바이에른 국립도서관 등 5곳이다(Rechtvorschriften 1992, 272). 시청각자료의 납본물 중 음반은 독일국립도서관의 음반아카이브에 납본된다. 고가의 납본자료는 50%의 실비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의 경우 분야와 형태에 다음과 같이 납본의 규칙이 다르다.

- 인문, 사회과학분야의 논문은 80부를 해당 대학도서관에 제출
- 의학, 자연과학과 기술분야의 논문들은 40부를 해당 대학도서관에 제출
- 만약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는 3-6부를 해당 대학도서관에 제출
- 만약 학위논문이 단행본으로 출판될 경우 3-6부를 해당 대학도서관에 제출하고, 초판은 최소한 150부 이상이어야 하며, 판권지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임이 명시되어야 함.
- 학위논문의 제출을 마이크로펫쉬로 대신할 경우는 학위논문도 복사가 가능하도록 3-4부 제본하여 펫쉬와 같이 제출(Rechtvorschriften, 275).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에 관한 흥미로운 규정 중의 하나는 사용료 문제이다. 즉 공공도서관에서 연주회나 음악회를 주최할 때 여기서 사용되는 음반 등의 예술작품의 사용은 주최 장소의 크기, 입장료에 따라 계산하여 음악저작권협회(Verwertungsgesellschaft)에 지불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자세하게 도서관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9. 결 론

거의 반세기 동안의 분단 상황에서 다시 재결합한 통일 독일의 도서관계는 동독의 도서관을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동독 도서관에 대한 대규모 재구조 작업을 시작했다. 이 중대한 사업을 위해 연방정부의 교육학문성은 먼저 동서독 교육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교육위원회는 도서관 분야의 연구를 위해 도서관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였다. 이 도서관 전문가그룹은 다시 6개의 AG로 조직됐다. 이 6개의 AG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권고안들을 내놓았다. 이 권고안들은 동

독의 도서관을 유럽의 수준, 더 나아가서는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다. 학술도서관 분야에서는 주로 학술자료의 제공에 신속을 기하고 국제 경쟁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백 상태에 있었던 자료의 확충에 주력하고, 공공도서관 분야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회주의의 이념에 젖어있던 동독 주민들을 확일성에서 벗어나게 하여 창조적이고 다양한 인격체의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념서가를 헐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바탕을 둔 장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서관 전문가들은 동독 도서관의 재정비 작업에서 가능한 한 과거 동독의 도서관 문화와 정서를 살리면서 서독의 도서관 시스템에 조화, 융합시킨다는 기본 방침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서독의 도서관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서독 두 나라는 도서관의 통합 과정에서 각기 그들 도서관 현실에 대한 이해와 또한 장점은 장점대로 인식,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서로의 시스템을 비교하는 경쟁심리를 극복하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이었으며, 이 점은 특히 통일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서독의 도서관계는 동독의 도서관과의 통합을 통해 그들의 낙후한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이 통합을 통하여 도서관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가들의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된 결과 수많은 권고안이 채택, 출판되어 모든 도서관 관련자들이 통일 업무에 동참하고 있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게된 것도 하나의 중요한 결과로 평가될 것이다.

정치적 통일은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문화적 통일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위의 예에서 배울 수 있다.

참고문헌

- Arbeitsvorgänge in Öffentlichen Bibliotheken. 1991. Beschluss und Bewertung von bibliothekarischer Arbeitsplätzen. Berlin : DBI.
- Auswahlliste zum Auf- und Ausbau von Informationsbeständen in Öffentlichen Bibliotheken. 1993. Berlin. (DBI Materialien, 127)
- Auswahlverzeichnis wichtiger Nachschlagwerke für Öffentliche Bibliotheken. 1992. Berlin. (Arbeitshilfe des DBI)
- Barsch, U. und M. Gloger. 1994. "Deutsch-Deutsch Bibliothekspartnerschaft Öffentlicher Bibliotheken." Bibliothek, Forschung und Praxis. Jg. 18 Nr. 1. : 41 - 48
- Beyersdorf, G. 1991. "Kooperation mit den neuen Bundesländern. Wissenschaftliche Bibliotheken im vereinten Deutschland." 81. Deutscher Bibliothekartag in Kassel. ZfBB (Zeitschrift für Bibliographie und Bibliothekswesen). Sonderh. 54. : 25-33
- Bibliotheksplan '73. Entwurf eines umfassenden Bibliotheksnetze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utsche Bibliothekskonferenz. 1973. Berlin.
- Bund-Länder-Arbeitsgruppe Bibliothekswesen. Abschlussbericht 1990-1992. Empfehlungen und Materialien. 1993. Berlin. DBI. (Dbi Materialien, 126)
- Dorpinghaus, H.J. 1991. "Das Infrastrukturprogramm der Volkswagen-Stiftung für die Universitäten der neuen Bundesländer." Bericht über eine Förderungsmaßnahme. ZfBB. Jg. 38. H. 2. : 190-193
- EDV-gestützte Bibliotheksdienstleistungen. 1991. Berlin. DBI. (Dbi Materialien, 110)
- Einbeziehung wissenschaftlicher Bibliothek der neuen Bundesländer in die Förderung durch di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1992. Empfehlungen des Bibliotheksausschusses. ZfBB. Jg. 39. H. 3. : 182-189
- Empfehlungen zur Förderung der Bibliothek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1. Bund-Länder-Arbeitsgruppe Bibliothekswesen. Berlin: DBI. (Dbi Materialien, 106)
- Griebel, R. 1993. "Etatsituation der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in der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1993." ZfBB. Jg. 40. H. 6. : 485-526
- Informationsdienst für Öffentliche Bibliothe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86.

- Berlin: (Dbi Materialien, 56)
- Ketcham, L. and K. Born. 1993. "The art of projecting: the cost of keeping periodicals." Library Journal 12. 04. : 42-48
- Kinder-und Jugendvideos in Offentlichen Bibliotheken, 1992. (Dbi Materialien, 122)
- Koschorreck, W. 1958. Geschichte des deutschen Leihverkehr. Wiesbaden. Harrasowitz.
- Kunze, H. 1977. Grundzuge der Bibliothekslehre. 4. neubearb. Aufl, Leipzig.
- Lehman,K.-D. 1990. "Bibliotheken auf Europa vorbereiten." ZfBB. Jg. 37H. 4. p. 289-306
- Oehmig, E. 1992. "Zum Stand der Bibliotheksarbeit in Sachsen-Anhalt". ZfBB. Jg. 39 .H. 3. : 196-206
- Plassman, E. und T. Seela. 1992. "Bibliothekarische Studium in Leipzig." ZfBB. Jf. 39. H. 6. : 555-557
- Rechtvorschriften fur die Bibliotheksarbeit. 1992. Hrsg. von Rechtskommission des Deutschen Bibliotheksinstitut, Berlin: (Dbi Materilaen, 117)
- Rost, G. 1992. "...was die Mode streng geteilt. Eine Leipziger Sicht auf die Vereinigung von Deutscher Bucherei und Deutscher Bibliothek." ZfBB Jg.39 H. 3. : 181-195
- Schmidt, M. 1990. "Das Deutsche Bibliotheksinstitut(DBI) in Berlin- ie Knotenpunkt fur deutsch-deutsch Bibliothekskontakt." Bericht uns Mitteilungen. ZfBB. Jg.37. H. 5. : 457-458
- Steigers,U. 1991. "Jahrbuch der Deutschen Bucherei." Bericht und Mitteilungen. ZfBB. Jg. 38. H. 1. p.71
- Wiesner, M. 1991. Fundus, Arbeitshilfe und Nachschlagwerke fur die Erwerbung. Berlin: (Dbi Materialien, 101)

ASBTRACT

A Study of the Germa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After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Moon-Ja Ro*

When the unification process was established, West German librarians formed a commission for all library and information sectors. After legal unification, the committee formed 6 Arbeitsgruppe(AG) to develop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ies for the country. This was designed specially to elevate the level of the East German library system to the West German standard.

The first AG concerns the public libraries. The second AG focuses on the education syste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pecialists. The third AG examines the academic libraries. The fourth AG reviews the regional and national library services and the central organization. The fifth AG explores library and information techniques. The sixth and final AG inspects the legal problem of libraries.

Each AG consists of specialists from both East and West German library systems who are experts in their particular subject area. The committee has general meetings to determine the best direction for the nation's library system. Common knowledge indicates this unification was based on economical amalgamation(fusion) from East Germany to West Germany. The unification resulted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recommendations tending to favor the more advanced West German policies. In this process there are a number of subtle ideolog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If before the separation they had developed their library system as one entity, they could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 & Info. Sci., SoongEui Women's Junior College.

overcome the current differences with much less confusion.

In this political phenomenon we can learn that cultural unification needs more time than political unification.